



주간통일정세 2013-19(2013.05.06 ~ 05.1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3-1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내부결속 다지기... "黨은 인민의 운명 책임진다"(5/6,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노동당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온다 해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자기의 사명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날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란 제목의 논설에서 "원수님(김정은)께서 계시는 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에서는 사소한 변색도, 한치의 탈선도 없을 것"이라며 강조함.
- 北, 국가건설감독상에 권성호 임명(5/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6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3차 5·21건축축전 개막식 행사를 소개하면서 참석자 가운데 권성호를 국가건설감독상으로, 김석준 전 국가건설감독상을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장 겸 국가설계지도국 국장으로 호칭함.
- 北 김정은, 평양 주요 軍건설현장 시찰(5/7,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에서 인민군이 건설중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미림 승마구락부'(승마클럽) 등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이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본 뒤 "볼수록 멋있다고,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정말 잘 건설하였다고 대만죽을 표시하시였다"고 통신이 전함.
- 北 김정은 군부대 수행 주목 박정천은 포병사령관(5/8, 연합뉴스)
 - 최근 중장(우리의 소장)에서 상장으로 한 계급 승진한 북한 인민군 장성 박정천이 군 포병사령관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한 대북 소식통은 8일 "최근 상장으로 승진한 박정천은 몇 해 전부터 포병사령관을 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박정천은 특히 김정은이 지난 3월 중순부터 최전선 부대를 시찰하고 각종 훈련을 참관할 때마다 수행해 주목을 받았다"고 말함.
- 北 김정은 부부, 은하수관현악단 '전승절' 공연 점검(5/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전승절'(정전



협정 체결일·7월 27일) 60주년 경축공연을 준비 중인 은하수관현악단을 찾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통신은 8일 김 제1위원장이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 모란봉악단과 합동공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연 방향과 종목, 편성 등에 대해 지시했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전승 60돌 경축공연을 통해 국보적인 예술단체로서 위력을 과시해야 한다"며 "모란봉악단과 합동공연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지금부터 공연준비를 착실히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수행 새 '얼굴'...최휘 당 제1부부장 주목(5/9,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행자 그룹에 최휘 당 제1부부장이라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북한 매체는 9일 김 제1위원장 부부가 전날 '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60주년 경축공연을 준비 중인 은하수관현악단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면서 수행 간부에 최휘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포함됐다고 소개함.

● 北 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점검(5/9,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찾아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박 총리는 현지에서 경제와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관철에서 전력증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원료 및 자재를 충분히 보장하는 대책을 논의함.

● 北 "농업은 반미대결전의 전선"...중산 독려(5/10,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주 타격 방향 농업전선 앞으로!'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먹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떠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 선군 혁명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라며 전 주민이 '영농전투'에 나설 것을 촉구함.
- 신문은 특히 농업이 "반미 대결전, 사회주의 수호전의 가장 첨예한 전선"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환기시킨 뒤 한국과 미국이 "우리가 잘사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고 천만부당한 제재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강대한 선군조선의 본패를 보여주자!"라고 호소함.

● 北, 은하수관현악단 지휘자에게 인민예술가 칭호(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0일 윤범주에게 인민예술가 칭호를 수여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그(윤범주)는 조선 인민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혁명적인 음악작품들을 창작형상함으로써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 사회주의 조국 수호정신과 원수격멸의 의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함.

- 北 "김정은, 경제관리 해결책 지시...시험 실시"(5/11, 조선신보)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을 지시해 일부 조치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북한 간부들이 전했다고 조선신보가 11일 전함.
 - 북한 내각 사무국의 김기철 부부장과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은 1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나라의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할 데 대해 말씀을 주시고 일꾼과 학자들에게 과업을 주셨다"며 "우리는 연구기관, 경제부문들과 함께 여러 차례 국가적인 협의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다"고 말함.
- 北 강원도당 책임비서에 박정남 임명(5/1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원도 올림명승지 현지지도 10주년 보고회 소식을 전하면서 "박정남 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원도회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고 밝힘.



■ 김정은동향

- 5/6,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경순 할머니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5.6, 중통)
 - 최룡해 · 장성택 · 현영철 · 리영길 등 동행
- 5/7,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대에서 건설중인 여러 대상들 시찰(5.7, 중통·중방·평방)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 △문수물놀이장 건설장 △미림승마구락부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인 차수), 황병서·마원춘(黨 부부장들) 동행
- 5/8,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은하수관현악단의 '전승'(*정전협정 체결, 7.27) 60돌 경축 공연준비 점검 및 창작가·예술인들 접견 격려(5.8, 중통 · 중방 · 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김기남(黨 비서), 최휘(黨 제1부부장) 등 동행
- 5/12, 김정은 제1위원장의 만경대유회장 현지지도는 '낯은 사상관점·일본새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적 계기, 모든 일꾼들은 영도자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5.12, 중통·노동신문/사설, 일꾼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
 - '김정일 애국주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자의 참된 삶을 빛내여 나가자'고 독려(5.12, 중방/김정일 애국주의는 강성국가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 담보)
 - 김정은, 만수대지구 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13,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 5.6 네덜란드 국왕(빌럼 알렉산더르)에게 '국왕 즉위' 관련 축전(5.7,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찾아 과학자·기술자 등 격려(5.9, 중통)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관철에서 전력증산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강조
 - 또한 이에 앞서 '문덕군 용림협동농장'의 영농실태(모내기 준비 상황 등)도 점검

나. 군사

- 北, 1호 전투근무태세 해제...무수단미사일 철수(종합)(5/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3월 미사일 · 장거리 포병부대에 발령한 '1호 전투근무태세'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지난달 초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한 무수단(사거리 3천~4천km) 중거리



미사일도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됨.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7일 "북한의 최고사령부가 3월 26일 전략로켓군과 장거리 포병부대에 발령한 1호 전투근무태세를 4월 30일께 해제한 것 같다"고 밝힘.

다. 경제

● 北 "식량부족은 세계적 문제"...자급자족 강조(5/6,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식량안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를 비롯한 국제 경제기구들과 전문가들이 올해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며 "그 어느 대륙, 지역이라 할 것 없이 제일 난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식량문제"라고 보도함.
- 신문은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식량부족으로 영양실조자가 계속 늘어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자 수가 세계적으로 약 8억7천만 명에 달하였다"며 "식량위기는 몇몇 나라와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밝힘.

● 北, 모내기철에 총역량 집중 독려(5/8, 노동신문)

- 북한이 모내기 철을 맞아 국가 전체가 농사에 총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모내기 전투를 힘있게 벌이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쌀은 곧 사회주의"라며 "농사를 잘 지어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릴 수 있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함.

● 北 부동산사용료 제도 개선 추진..."재정확충 목적"(5/9, 연합뉴스)

- 북한이 2000년대 중반 도입한 토지 등 부동산 사용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3년 1호에 실린 '부동산 사용료의 적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부동산 사용료를 바로 적용해야 부동산의 효과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에 집중시키도록 할 수 있다"고 밝힘.

● 北 "자본주의 문화는 독소"...혁신 경계(5/9, 노동신문)

- 북한이 9일 출판과 문화예술, 전자매체 등을 통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문화가 내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회주의를 해치는 독소'라는 제목의 글



에서 미국과 남한이 "방송과 출판물, 문예물은 물론 상품 등을 통해서도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북한에 주입하기 위해 날뛰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전자매체와 인터넷도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들 매체가 "인민대중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쪼먹고 해치는 독소"라고 지적함.

라. 사회 · 문화

● 北, 올해 아리랑 공연 7월 22일 개막(5/6, 코리아 컨설팅)

- 북한의 대규모 집단체조(매스게임)인 아리랑 공연이 오는 7월 22일 시작한다고 한 북한 전문 여행사가 6일 전함.
- 스웨덴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코리아 컨설팅'은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아리랑 공연이 7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4차례 진행된다"며 "티켓 가격은 일반석 80유로(약 11만5천원)에서 VIP석 300유로(약 43만원)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함.

● 北 전역서 주민편의시설로 롤러스케이트장 건설붐(5/7,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남포시와 원산시에 롤러스케이트장들이 건설돼 이곳을 찾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최근 평양시에 이어 지방 주요 도시에도 롤러스케이트장을 건설하며 주민들의 여가생활 보장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분기 조사결과 북한 주민 80%가 영양 부족(5/7, 미국의 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이 올해 1분기 대북사업 평가보고서에서 북한 10가구 중 8가구가 영양부족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전함.
- WFP는 올해 1~3월 북한 전역의 87개 가정을 방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80%가 영양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함.

● 北 '자전거 투어 대회' 개최(5/8,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열흘 동안 각지에서 계속되는 자전거 투어대회가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함.
- 통신은 8일 '여러날 자전거경기'가 시작됐으며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기에는 경공업성체육단, 예성강체육단, 동명산체육단의 남녀 선수 50여 명이 참가한다"고 밝힘.

● 北 지방서도 동물원 단장에 물놀이장 건설(5/8,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권이 2년차를 맞은 올해 들어 잇따라 지방에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북한판 뉴타운'인 창전거리, 능라인민유원지, 평양민속공원, 만경대유원지



린"이라며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함.

● **북한 체육계, 국제대회 참가 준비...협찬 타진(5/7, 중국망)**

- 북한이 올해와 내년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 문제를 최근 중국 체육계 인사와 협의했다고 중국 관영 뉴스 사이트인 중국망(中國網)이 7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 체육계와 친분이 두터운 중국 프로축구 선전(深田 <土+川>) 루비 FC의 왕치(王奇) 부회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북한 측의 초청으로 방북해 체육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함.

● **북한, 중국에 개성공단 철수 근로자 고용 요청(5/9, 아사히신문)**

- 북한이 중국 측에 개성공단 철수 근로자를 고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은 9일 익명의 '중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중국 선양(瀋陽)발 기사에서 북한의 지방 고위관계자가 4월 중순 중국 단둥(丹東)시를 방문해 중국에 파견하는 북한 근로자를 늘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함.

● **北 "케네스 배씨 변호 거절...범죄사실 인정"(5/10, 연합뉴스)**

-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재판에서 변호를 거절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북한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4월 30일 배씨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배준호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힘.

● **北 "이스라엘 이란 공격론 배후는 미국"(5/10,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대(對)이란 공격론 부추기는 군사적 망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군사적 원조까지 해가며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란 핵 협상 결렬 이후 이스라엘에서 이란 공격론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공중급유기 KC-135를 비롯한 대규모 군사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기로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함.

● **중국 좌파 인사들, 지난달 북한 지지방문(5/10, 중앙통신(CNA))**

- 중국 좌파 인사들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



조된 지난달 중순 북한을 지지 방문했다고 대만 언론 중앙통신(CNA)이 10일 보도함.

- 대만 중앙통신(CNA)은 중국 주간지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周刊) 최신호를 인용, 중국의 대표적인 좌파 인터넷 사이트 유토피아닷컴(烏有之鄉·우여우즈상) 회원 13명이 지난달 13~16일 북한을 찾았다고 전함.

● 北신문 "美, NPT 난폭하게 위반한 나라"(5/11, 노동신문)

- 북한은 11일 미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비핵국가들에 대한 간섭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밝힘.
- 신문은 이날 '비핵국가의 반발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달 말 스위스에서 열린 NPT 회의에서 이집트 대표가 이스라엘이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고 이란이 NPT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이 자기 사명과는 달리 비핵국가들에 대한 불순세력들의 지배와 간섭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함.

● 北노동신문 "日 우경화는 나라 망치는 길"(5/12, 노동신문)

- 최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을 망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밝힘.
- 신문은 '일본의 우경화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날로 심해지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함.
- 또한 일본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교과서 검정 제도 수정 방침,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면서 이는 "일본의 현 대내외정책의 기본 목적이 정치의 극단적인 우경화, 군국화, 해외 팽창을 실현하는데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강조함.

● 어나니머스 '조선의소리' 등 北사이트 10여곳 공격

- 국제해커집단 어나니머스가 북한 웹사이트 10여 곳을 공격해 이중 북한 라디오방송 '조선의 소리' 홈페이지가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 어나니머스는 12일 트위터(@AnonyOpsKorea)를 통해 "북한 라디오 방송 '조선의 소리' 웹사이트를 해킹했다"며 해킹된 홈페이지의 캡처 사진을 공개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 최고재판소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답변(5.9)】 배준호氏 재판에 대한 美정부와 언론들의 불투명성·법적 부당성발언 관련 '변호를 거절하고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범죄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주장(5.9, 중통)
- 그의 범죄는 공화국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의해 사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해당하나 솔직하게 인정한 것을 고려하여 15년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으며, 교화기간 공화국법에 따라 교화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될 것임.

나. 6자회담(북핵)

● 北 "핵보유는 정치적 흥정물 아니다" 거듭 주장(5/6, 노동신문)

-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일 자신들의 핵보유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누구도 흥정할 수 없는 법적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핵보유를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로 농락하려드는 미제와 괴뢰들의 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법에 도전하는 극악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라고 주장함.

● 北, 美 의회 발의 "대북제재 법안은 자해행위" 비난(5/7,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논평에서 "최근 미국 의회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로써)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노리는 목적은 북한의 경제건설에 난관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보유한 핵은 경제적 혜택을 위한 그 어떤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北, 日 핵연료 반입은 "핵무장 시도" 비난(5/8, 노동신문)

- 북한은 8일 일본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혼합산화물(MOX) 반입을 재개하는 것은 핵무장 시도라고 규탄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핵무장화를 노린 연료구입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이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계속 구입하는 기본 목적은 핵무장화를 다그치자는 데 있다"고 비난함.

● 北, '작년말 로켓발사때 여론전으로 적 교란' 자부(종합)(5/10,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 여론전으로 국제사회를 교란하고 주도권을 쥐었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조선노동당 간부의 내부 강연 '음성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신문 "서울시 탈북자 간첩사건은 모략극"(5/6,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터무니없는 모략광대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들이 연출한 '자유주간행사'니, '탈북자간첩사건'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체제에 감히 먹칠을 하고 북남관계를 극단적인 파국상태에 계속 비끄러매놓기 위한 또 하나의 모략광대극"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론조작으로 선거 판세를 뒤집은 불법무법의 망동 때문에 여론의 못매를 맞고 쑥대밭이 된 괴뢰 정보원이 생뚱같이 '탈북자 간첩사건'이라는 것을 들고나온 그 알팍한 속타산이야 뻔하지 않은가"라며 "민심의 비난의 화살을 딴 데로 돌려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함

● 北, 서해 연합훈련에 "즉시적 반타격전" 위협(종합)(5/7,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7일 한미 연합 대잠훈련 등을 거론하며 "적들의 도발적인 포사격으로 우리측 영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서남전선사령부는 이날 '보도'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키 리 줄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5일부터는 백령도와 연평도주변 해상에서 또다시 아군지역을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산하 부대에 이같이 명령함.

● 北, 한미군사훈련에 반발..."서해 불바다" 위협(종합2보)(5/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이달 들어 새로 시작한 한미 군사훈련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서해 5도 불바다' 등의 거친 표현으로 위협에 나섰다라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북한은 이날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보도'에서 한미 군 당국이 지난 6일 시작한 서해 대잠수함 훈련과 오는 10일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한반도 해역 진입 등을 거론하며 "적들의 도발적인 포사격으로 우리측 영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하라"고 산하 부대에 명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서남전선사령부는 "우리의 반타격전에 적들이 무모하게 대응하는 경우 서남전선지구엔 전개된 로켓군부대(미사일부대)의 즉시적인 행동개시를 계기로 모든 타격집단은 조선 서해 5개 섬부터 불바다로 타번지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함.

● 北, 朴대통령 방미에 "망신행차" 비아냥(5/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실린 2단짜리 '망신행차'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박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부터 낯뜨겁게 푸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함.

● 北, 美대통령 비난..."적대행위 멈춰야 충돌위험 없다"(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이나 위협을 언급해 진실을 오도했다며 "최근 새롭게 첨예화된 조미(북미) 사이의 대결은 다름아닌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걸고 든 미국의 포악한 적대행위로 발단된 것"이라고 주장함.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언급하고 "우리는 미국이 계단식으로 고조시킨 적대행위들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위적 대응조치들을 취한 것 밖에 없다"고 밝힘.

● 北매체, '윤창중 사태' 비난..."불통인사"(5/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작가 박진경이 투고했다는 '성추행이 잘못된 인사 탓, 그 책임은'이라는 글에서 이번 사건을 "세계정치사상 처음있는, 그야말로 남조선 보수패당만이 세울 수 있는 수치스런 기록일 것"이라며 "그런 자들이 집권자의 주위에 진을 치고 있으니 청와대의 정치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것은 눈을 감고도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주장함.

● 北조평통, 朴 대통령 방미 비난..."전쟁전주곡"(종합)(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기자와 문답에서 박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호칭하고 "남조선 당국자의 이번 미국 행각 결과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위험천만한 전쟁전주곡"이라고 주장함.
- 조평통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앞으로 있을 수 없으며,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함.

● 조선신보 "朴대통령 임기중 남북대화 의문"(5/11,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를 혹평하면서 현 정부에서 남북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신보는 이날 '대화외교, 평화협상의 교란요인/ 남조선 당국자의 미국 행각'이라는 글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비판한 데 대해 "상대방의 심기를 일부러 건드리는 경직된 대북관이 현 당국자의 본색이라면 그의 임기 중에 북남대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함.

● 北조평통, 니미츠호 부산 입항에 반발..."군사도발"(5/1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서기국 '보도'를 내고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가 최극단에 이른 때에 최신 공중전쟁 수단들과 이지스구축함, 미사일순양함 등으로 구성된 핵 항공모함 전단까지 투입해 연합해상훈련을 벌여놓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 공갈이고 기어이 북침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함.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번 훈련이 진행된다는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시아평화구상' 등을 언급한 것이 "도발자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낯두리"였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함.

● 北 매체, '윤창중 사건' 연일 비난(5/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성추행 행각'이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 안방주인의 외국 행각 도중 고위 수행원이 부끄러운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함.
- 신문은 "결국 미 의회에서 연설한다며 으스대던 청와대 안방주인의 이번 미국 행각은 성추행 행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실패한 행각"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경색 국면 책임 전가하며 대남비난 지속(5/6, 노동신문)

- 북한은 6일도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며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책임회피를 위한 비열한 소동'이라는 글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영영 폐쇄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반통일 대결에 환장해 날뛰 괴뢰 당국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한에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됨.

● 北매체, 남측의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 요구' 비난(5/9,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9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태 재발 방지 약속이 필



- 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궤변"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재발방지확약 망발, 금강산관광 파탄 때와 똑같은 궤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 직전까지 몰아간 장본인이 누구인데 누구에게 '확약' 타령인가"라고 반문함.
 - 그러면서 류 장관의 발언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던 때의 수법과 일맥상통한다"며 당시 남한이 3대 조건을 제시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이 때문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했다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5.10)】 대통령의 訪美기간 對北 발언(병진노선은 불가능한 목표, 한반도실패프로세스 등)들 관련 '상전의 눈도장을 찍고 주종관계를 확인하며 반공화국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사대매국행각, 동족대결행각'이라고 비난(5.10, 중통·중방·평방)
 - 미국행각 결과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상전과 주구의 역겨운 입맞춤이고 북침과 대아시아패권전략 실현의 위험천만한 전쟁전주곡임.
 - 우리(北)는 현 남조선당국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음.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36호(5.10)】 '천안함 사건은 北어뢰공격'이라는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 '남북관계를 결단내기 위해 의도적·계획적으로 조작한 특대형 反北 모략극'이라며 '역사와 민족,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5.10, 중통·평방)
 -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는 南의 양심적인 영화제작자들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민심과 여론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든 영화라고 주장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6자수석 내주 방한...정상회담 후속 대북정책협약〉(5/9, 연합뉴스)
 - 미국 6자회담 수석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소식통은 9일 "데이비스 대표가 내주 중 방문할 것으로 안다"면서 "정책 협의차 한·중·일 3국을 순방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 데이비스 대표는 13~15일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한 기간 우리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하고 다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 임 본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북 문제 조율차 미국을 방문, 지난 6일(현지시간) 데이비스 대표와도 만났음. 데이비스 대표가 이번에 방한하면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연쇄적으로 만나게 됨.
 - 두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밝힌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대북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이 과정에서 대화와 압박 전략을 어떻게 구사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고 중단된 비핵화 대화에 동력을 주입할지도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국이 지난 7일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데이비스 대표의 중국 방문도 주목됨.
 - 데이비스 대표와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달 말에도 워싱턴에서 회동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이번에는 미·중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나. 미·북 관계

- 〈"美구호단체, 이번주 北에 의약품 지원"〈美방송〉〉(5/7, 연합뉴스)
 - 한반도 긴장 국면 속에 미국 비정부기구(NGO)가 이번 주 북한에 의약품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음.
 - 미국 구호단체 아메리카케어스(AmeriCares)는 이번주 항공편으로 평양을 비롯한 일부 북한 지역에 2만3천 파운드(약 10.5t)의 의약품을 지원한다고 RFA에 밝혔음.
 - 이들 의약품은 항생제, 위장약, 피부병 치료제, 심장혈관계 질병 치료제 등이며 평양의 6개 의료시설과 평안남도, 황해북도 지역 소아병동, 진



료소, 전문병원 등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칫솔과 비누 같은 기본 위생용품도 지원 물품에 포함됐다.

- 아메리케어스는 북한에 의약품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의약품 전달은 인도주의적 지원이며 정치적인 분위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
- 아메리케어스는 1997년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북한에 항공편으로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대북 지원 활동을 벌여왔음. 지난해 9월에는 북한의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이재민 17만5천명에게 70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을 지원했음.
- 한편, 올해 1~3월 북한과 미국의 교역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음.
- VOA는 미국 상무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올해 1분기 북·미 교역액은 108만5천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78% 줄었다고 전했다.
- 이는 전액이 미국의 대북 수출액으로, 북한의 대미 수출은 없었음. 미국 수출액의 약 90%는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됐음.

● <오바마 "北, 도발로 양보연는 때 끝나...대화는 준비">(5/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위기를 만들어 내고 양보를 얻는 때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박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처럼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부담은 평양에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우리 두 사람은 북핵이 버마(미얀마)와 같은 나라에서 진행되는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면서 "(미얀마처럼) 무역과 투자를 더 추구하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와의 외교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음.
- 그는 또 "미국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를 통해 확보되는 억지력을 통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할 충분한 능력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평양이 최근의 위협을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북한은 다시 한 번 실패했음이 명백하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단합하고 있고, 북한은 새로운 국제 제재에 직면해 어느 때보다 고립돼있다"고 역설했음.
- 그는 "양국은 오는 210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비롯해 양국 안보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위협에도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우리 두 사람은 안보 동맹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



의했다"면서 "방어역량과 기술, 미사일방어(MD) 등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군의 공동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공식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한미 FTA는 이미 양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한·미 FTA 발효 이후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부문의 공조, 학생교환 프로그램, 시리아 사태 등 폭넓은 양자 및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 <北 "케네스 배씨 변호 거절...범죄사실 인정">(5/10, 연합뉴스)

-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재판에서 변호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 북한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4월 30일 배씨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배준호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 또 배씨의 '국가전복음모죄'는 사형이나 무기노동교화형에 해당하지만 자신이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한 것을 고려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변인은 배씨가 2006년 4월 국제예수전도단의 선교사로 중국에 파견되고 6년간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과 중국인, 외국인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반공화국 강의'를 했고 학생 250여 명을 나선시에 데려와 종교 활동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배씨가 '15억 중국, 그리고 지구상 마지막 패쇄국 북한' 등의 반공화국 동영상을 수집, 제작해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을 매수해 정권 전복 음모에 가담시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 앞서 배씨는 북한에 대한 외부의 도움을 호소하려고 '꽃제비'의 사진을 찍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 한편, 중앙통신은 최고재판소 대변인의 설명이 미국 정부와 언론이 배씨 재판의 불투명성과 법적 부당성 문제를 언급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 <北, 美대통령 비난..."적대행위 멈춰야 충돌위험 없다">(5/1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정세 악화



- 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궤변을 했다고 비난했음.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이나 위협을 언급해 진실을 오도했다며 "최근 새롭게 첨예화된 조미(북미) 사이의 대결은 다름아닌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결코 든 미국의 포악한 적대행위로 발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로 양보를 얻는 때는 끝났다"고 말했다.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언급하고 "우리는 미국이 계단식으로 고조시킨 적대행위들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위적 대응조치들을 취한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이어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적의를 버리지 않는 한 긴장의 근원은 없어질 수 없으며 정세악화와 충돌의 위험은 반드시 재발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다른 누구의 '변화'를 칭얼거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릇된 관점부터 제때에 돌아쳐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실명을 쓰지 않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호칭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라고 표현했음.

● <北신문 "美, NPT 난폭하게 위반한 나라">(5/11, 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미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비핵국가들에 대한 간섭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비핵국가의 반발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달 말 스위스에서 열린 NPT 회의에서 이집트 대표가 이스라엘이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고 이란이 NPT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이 자기 사명과는 달리 비핵국가들에 대한 불순세력들의 지배와 간섭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가장 난폭하게 위반한 나라"라며 미국이 핵무기 생산·개발과 '핵전쟁 연습'을 계속하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도왔다고 비난했음.
- 신문은 또 NPT의 문제점으로 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를 합법화해주지만 비핵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한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 그러면서 "핵문제에서 미국의 이중기준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 요구와 국제법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응당 엄중시돼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적인 사찰을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북한이 이처럼 NPT의 문제점과 국제적 반발 사례를 들어 미국을 비난한 것은 핵무기 개발을 정당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한편,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2003년 IAEA가 핵시설 감시 체제 복원 및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해명을 촉구하는 대북결



의안을 통과시키자 탈퇴했음.

- <北조평통, 니미츠호 부산 입항에 반발...> (5/11, 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려고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비난했음.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내고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가 최극단에 이른 때에 최신 공중전쟁 수단들과 이지스구축함, 미사일순양함 등으로 구성된 핵 항공모함 전단까지 투입해 연합해상훈련을 벌여놓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 공갈이고 기어이 북침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번 훈련이 진행된다는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시아평화구상' 등을 언급한 것이 "도발자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낚두리"였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음.
 - 조평통은 이어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은 적들의 그 어떤 도발과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할 만단의 격동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만약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멸적의 불벼락으로 미제의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침략 무력을 모조리 수장해버리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했음.
 - 한편, 니미츠호는 이날부터 13일까지 부산에 머물고 다음 주부터 남해와 동해 일대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임.

다. 중·북 관계

- <북한, 중국에 개성공단 철수 근로자 고용 요청> (5/9,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 측에 개성공단 철수 근로자를 고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익명의 '중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중국 선양(瀋陽)발 기사에서 북한의 지방 고위관계자가 4월 중순 중국 단둥(丹東)시를 방문해 중국에 파견하는 북한 근로자를 늘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 이 관계자는 이때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숙련 근로자를 보낼 곳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측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사히신문은 북한 측이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보고 새로운 외화벌이 장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음.
 - 북한은 4월 초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만3천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를 철수, 한국도 관계자를 전원 철수시키면서 공단은 조업 중단 상태에 빠졌음.
 - 한편, 북한은 평양, 신의주 등지에서 모집한 근로자를 일단 귀향시킨 것으로 추정됨.



- 〈中4대은행 조선무역은행 거래중단, '정부도 파악'〉(5/10, 연합뉴스)
 - 중국은행 외에 다른 주요 중국 상업은행도 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중국 4대 은행의 거래중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고위소식통은 10일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한 은행이 중국 4대 은행이 전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행을 포함한 중국 4대 은행과 조선무역은행간 거래가 중단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 이 소식통은 "4대 은행 중 일부는 원래 조선무역은행과 거래가 없던 곳도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곳은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안 하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중국 4대 은행은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이다. 이 가운데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은행만 대변인 성명으로 지난 7일 조선무역은행 계좌폐쇄 및 거래중단 조치 사실을 확인했다.
 - 이들 은행의 거래중단 조치는 지난 3월 말께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이번 조치가 '은행 자체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는 조선무역은행이 유엔 대북제재가 아닌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고려한 설명으로 분석.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
 - 그러나 중국 내 정책 집행 구조와 이들 은행이 국유 상업은행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조치에 중국 정부의 의도가 개입됐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판단임.
 - 북한이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외교채널 등을 통해 항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자위대, 북한 미사일 경계태세 완화〉(5/10, 연합뉴스)
 - 일본이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동해에 파견한 해상 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을 2척에서 1척으로 줄였다고 NHK가 10일 보도
 -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안의 발사대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파악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NHK는 전했다.
 - 이에 따라 동해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이지스함 기리시마호가 이날 교토(京都)의 해상자위대 마이즈루(舞鶴)기지에 입항
 -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던 지난달 초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명령'을 발령. 방위성은 그에 따라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파견했다.
 - NHK는 아직 '파괴조치명령'은 유효하며, 동해에 남은 이지스함 1척과



- 여기에 두 정상이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즉 '서울프로세스'에 대해 협의한 것도 북한 문제 접근방식의 다변화를 꾀한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됨.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미국, 중국 정부 간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외교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
- 이미 북한은 지난 3월 미사일·장거리 포병부대에 발령한 '1호 전투군 무태세'를 최근 해제하고, 지난달 초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한 무수단(사거리 3천~4천km) 중거리 미사일도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북한의 도발위협이 일정 부분 해소된 듯한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는 것임.
- 양국 정상은 대북 공조 이외에도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한미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음. '동맹 60주년 기념 선언'이 대표적임.
-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아태 지역 평화변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을 지속해 양국 국민들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21세기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양 정상은 이와 관련,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공감대를 도출했음.
- '호혜적'이라는 표현이 나온 만큼,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와 부품, 쇠고가돼지고기 무역에서 미국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과 관련해 미국 측이 더 많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확대를 주장할 가능성도 커보임.
- 다만 우리 측에서도 국내에서 불평등 협상의 대표적 조항으로 지목돼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됨.
- 박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사 간부 간담회에서 "발효 1년을 맞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호혜적으로 이행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양국이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목됨.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가 공동 채택할 성명에는 한미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 및 정보 교류,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협력 확대, 청정 에너지 공동연구 개발 등이 포함됐음.
- 또 양국은 ICT 정책협의회를 설립, 차관급(잠정) 연례 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 ICT 정보의 신속한 국내 전파 및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하게 됨.

- 특히, 에너지와 ICT는 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창조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인 만큼, 이번 협력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우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부분도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임. 우리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쿼터 1만5천개 신설을 추진 중인데, 확보되는 비자 쿼터 규모만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기회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아울러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양자 간 협력 강화 방침을 천명하는 것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 (sharing and caring)' 동맹을 맺게 된 것은 양국이 21세기형 선진적 동맹관계를 맺어가는 좋은 예로 평가될 수 있음.
- 다만 중동 문제에 대한 협력 문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파병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이는 미국에서조차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내의 반대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 <한미 군축협약... "유엔 대북제재 충실 이행"> (5/10,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고 군축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음.
-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로즈 고테필러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대행이 양국 대표로 참석한 협의회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이행 문제가 집중 논의됐음.
- 양측은 실효적인 제재를 담은 결의 2094호를 평가하면서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음.
- 대북제재 이행 문제도 담당하는 고테필러 차관대행은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았으며 그 자리에서도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양측은 지난 3일 끝난 '2015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준비회의 결과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참여하는 'P5+1' 차원의 이란 핵 협상,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또 한미 군축비확산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안을 계속 논의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음.
- 협의회 뒤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고테필러 차관대행의 면담도 이뤄졌음. 이 자리에서 양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성공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토대로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음.
- 조 차관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 미국 고위급 참석을 요청했음.
- 고테필러 차관대행은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개정 협상 수석대표 등 당국자들과도 관심사를 논의했음. 양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을 조기 타결하



기 위해 협상을 가속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한·중 관계

● <중국 "박대통령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적극 평가">(5/9,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관한 일련의 목표를 제안했다"며 "한국의 제안 목표와 취지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관련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 화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중국은 관련국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관련국들과 함께 노력해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윤병세 "이른 시일 내 대통령 방중...기대이상 결과예상">(5/12,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의 북한 정책은 북한의 안정과 비핵화 두 가지"라면서 "최근 들어 비핵화 문제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윤 장관은 "중국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할 때 적극 동참하고 나아가 이행문제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은행이 조선무역은행을 제재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
- 윤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중국은 누차 외교채널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혀왔다"면서 "외교 일정상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한번 가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아무래도 가을 이전에는 실현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박 대통령에) 커다란 호의를 갖고 임하고 있으며 중국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해 신뢰외교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가면 기대 하는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정부는 현재 다음달 중순께 박 대통령의 방중을 검토중인 상태. 그는 "지금까지 중국관계는 경제는 뜨겁지만 정치안보 관계는 차가웠던 '경열정냉(經熱政冷)'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이를 '경열정열(經熱政熱)'관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 윤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지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일본이)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차분하게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서 정상 방문이든 외상 회담이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번 7월 참의원 선거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다"면서 "우리로는 (일본이) 가능한 이웃에 대해 과거와 다른 정책을 취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간 차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는 어떤 면에서 대화를 추진하는 방식에서 조금 유연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면서 인도지원 등 비핵화와 어느 정도 차별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열린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그는 다만 "이런 것도 역시 최근처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 또 새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관련, "참가국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려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처음부터 참석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여건상 어렵다면 적절한 단계에서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북한의 경우 당장 호응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면서 "중국은 벌써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이미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꽤 있다"고 전했다.
- 이밖에 그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전쟁 전주곡'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한 것과 관련, "북한은 자기들 이해에 맞을 때 거기에 맞는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런 반응도 어떤 것을 예고한다기보다 일차적으로 운을 띄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 한·일 관계

● <일본 관방장관 "전후 일본의 노력도 평가해달라">(5/9,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은 책임있는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일본의 전후(戰後) 발걸음과 역사도 정당하게 평가해 달라"고 반박했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오전 정례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과 한국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인접국이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는 연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나라(일본)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 큰 고통과 손해를 끼쳤다는 인식은 과거 내각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침략을 정의한) 유엔 총회 결의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식으로 침략을 부인하는 발언을 일삼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스가 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과거를 확실히 인식하면서 그 심각한 반성 위에 서서 전후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많은 나라와 공유하고 지역과 세계에 다양하게 공헌해왔다"며 "전후 일본의 발걸음, 역사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평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음.

- 그는 또 '한국이 일본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외교 루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음.
- 스가 장관은 이어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마일 관계 보고서'에서 아베 총리를 '강경한 민족주의자'로 평가한데 대해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며 반박했음.

● <여야 의원, 아베 총리에 신사참배 항의서한>(5/10, 연합뉴스)

- 여야 의원 95명으로 구성된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은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일본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음.
- 이 모임은 서한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한국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항의를 전달한다"며 "사과와 동시에 참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서한은 또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강제징용 한국인 2만1천 181명의 합사를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모임은 이 서한을 외교부를 통해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일본 의원들의 참배를 이끄는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의원모임'에도 보냈다고 모임의 공동대표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이 설명했다.
- 이외에도 이 모임은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을 철회하고, 역사 기술시 주변국을 배려한다는 내용의 교과서 검정기준인 '근린제국조항'을 유지시킬 것도 요구했음.

라. 미·중 관계

● <천광청 조카 둘러싸고 미·중 신경전>(5/6, 연합뉴스)

- 미국에 도피한 중국의 인권 운동가 천광청(陳光誠)의 조카 천커구이(陳克貴)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현재 수감 상태인 천커구이의 인권 문제를 미국이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임.
-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 자리를 통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천커구이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려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음.
- 전화를 받지 않은 왕 부장의 행동이나 외교적 불협화음을 공개한 미국 국무부의 행동 모두 외교적 상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임.
- 천커구이는 천광청이 탈출한 직후 자기 집에 들이닥친 공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이유로 체포돼 3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
- 그는 최근 맹장염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천커구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했음.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천커구이 사건은 보통의 형사 사건으로 중국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했다"며 "어떤 국가라도 중국의 내정과 사법 주권에 간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화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로서 법에 따라 국민의 합법 권리를 보장한다"며 "(천커구이도) 충분히 각종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 시진핑 국가주석을 필두로 한 5세대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과 집권 2기를 맞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이른바 '새로운 대국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 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인권, 통상, 환율, 안보 등 각 분야에서 술한 갈등을 노출하고 있음.

● <미 국방부 "中, 항모킬러 동풍-21D 실전 배치">(5/7, 연합뉴스)

- 중국의 최신형 대함 탄도미사일인 동풍(東風)-21D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미군 정보 당국이 공식 확인했음.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은 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만 중국시보 인터넷망이 7일 전했다.
- 미 당국이 실전 배치설이 끊이지 않은 동풍-21D의 작전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보고서는 이 미사일 배치가 미군의 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 작전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음.
-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동풍-21D는 사거리가 1천50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해협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성능임.
- 미국 학계 전문가들도 동풍-21D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를 격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음. 이는 동북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개입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는 "중국이 자국과 상당거리 떨어진 곳에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 국방부 "중국 정부, 인민군이 직접 해킹">(5/7, 월스트리트저널)

- 미국 국방부는 6일(월)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 기관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이제껏 가장 직접적으로 비난한 셈임.
- 미국 관계자들은 예전부터 사이버 스파이를 제일 많이 저지르는 나라로 중국을 지목해왔음. 하지만 이번에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이 사이버 침입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 비난
-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해군 전함과 첨단 전투기, 접근 차단 군사 시스템(적군의 전함이 중국 영해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에 투자했다는 내용을 소개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해킹을 감행한 이유는 중국 국방산업과 IT산업



- 의 발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중국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함.
- 미국 의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국방부 연차 평가 보고서는 "중국 은 미국 국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외교·경제·방위산업기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컴퓨터 네트워크 악용 능력(해킹)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미 중국 대사 측 대변인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7일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대함 순항 미사일을 해군 군함에 장착했고 미국 군함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진전을 보였다고 함.
 -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DF-21D를 비롯한 대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논의해왔음. 그러나 중국이 제한적인 운용능력의 미사일이기기는 하지만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힌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
 - 중국군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496km이며 기동성 탄두를 장착해 정확도가 높아졌음. 보고서는 "대함 미사일 덕분에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공모함을 비롯해 대규모 군함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
 -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중국이 움직이는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위성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는 지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음.
 - 헬비 부차관보는 중국이 지난해 "우주에 발사체를 상당히 여러 차례 쏘아올렸다"며 "중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
 - 외부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중국군이 현대화됐으며 대만해협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초점을 옮겼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
 - 앤서니 코즈먼 국제전략연구소(CSIS) 소속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세계에서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다"며 "중국이 다른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국 국방부, 美국방보고서 비난 가세>(5/9, 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는 9일 홈페이지에서 "미국이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 위협'과 '중국 군사력 불투명성'이라는 틀에 박힌 말을 다시 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중국이 국방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정당한 국방 건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 중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일본의 편을 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 "작년부터 특정 국가가 망동하는 것이 정세 긴장의 근원"이라며 "미국 보고서는 국제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극히 무책임하



다"고 비난했음.

- 경연성(耿雁生)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고의적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을 부풀려 양안 간 군사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양안 간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
- 경 대변인은 또 이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음.
- 앞서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지난 8일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를 '중국 내정에 대한 큰 간섭'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과 다른 나라, 특히 이웃나라 간의 관계에 불화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 해방군보는 또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 내용이 중국 군사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떠도는 추측들을 복사해 붙여넣기 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한편 사이버 해킹과 관련해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해킹 제국'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중국 군사·안보태세 보고서'에서 사이버 해킹의 주체로 중국 정부와 군을 직접 지목하고 중국의 군사력 발전 동향에도 우려를 제기한바 있음.

마. 미·일 관계

● <“아베 과거사 발언으로 미국 이익 훼손 우려”>(5/9,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과거사 발언 등으로 역내 외교관계가 불편해지면 미국의 국익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미국 의회에서 제기됐음.
- 8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마일 관계 보고서'에서 "논쟁거리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최근 아베 총리와 일본 내각이 내놓은 발언과 행동은 일본이 역내 관계를 잘못 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진단했음.
- 보고서는 특히 이런 역내 외교관계 갈등이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강조
-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 발언과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여겨짐.
- 이어 보고서는 "이른바 위안부로 불리는 성노예,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한국과의 영토분쟁에 대한 아베 총리의 접근은 미국은 물론 일본의 이웃국가들로부터 면밀한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밖에 보고서는 아베 내각이 지난해 말 총선에서 승리했으나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도전적인 중국, 침체된 경제, 후쿠시마 지진 피해 복구 등을 지목했음.



바. 미·러 관계

● 〈케리 美국무 방러 최악 양국관계에 돌파구 뚫을까〉(5/7,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러시아 방문이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고 있음. 케리 국무장관은 7일부터 이틀 동안 모스크바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임.
- 케리 장관은 미-러 양자 관계와 시리아 내전, 이란 및 북한 핵문제,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러시아 측과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미-러 양국이 각자 상대국을 겨냥한 인권법을 제정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지난달 케리 장관은 미국이 대러 인권법인 '마그니츠키법'을 제정하고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대미 인권법을 제정하면서 양국 관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음.
- 미국과 러시아는 각자 제정한 인권법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12일부터 이틀 동안 인권 침해자로 판정한 상대국 인사 18명씩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게 입국금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음.
- 미국이 먼저 2009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이 포함된 제재 명단을 발표했고 이에 러시아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부당대우와 러시아인 인권 침해에 가담한 미국 인사들로 구성된 블랙리스트를 공개했음.
- 그리잖아도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계획 추진으로 악화한 양국 관계가 '블랙리스트 공방'으로 최악으로 치달았음. 시리아, 이란, 북한,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미-러 공조가 필수적인 국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깊어져만 가는 양국 갈등은 어느 쪽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음.
- 양국 내에서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중순 톰 도닐런 미 국가안보 보좌관에 이은 케리 장관의 러시아 방문이 양국의 갈등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가 높음.
-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러 관계 회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오바마는 이미 지난달 방러한 도닐런 보좌관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의사를 담은 친서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음.
-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오바마 친서에 대해 "건설적 논조로 쓰였으며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러시아가 미국 측의 관계 개선 의지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임.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공보실장은 그러나 6일 푸틴 대통령이 당장 케리 장관과의 면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장을 전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크렘린궁이 아직 답장을 준비 중이라



면서 다음 달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때까지 친서에 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러 美에 보스톤 테러 막을 결정적 정보 능력 전달”>(5/12, 연합뉴스)

- 러시아 정보 당국이 미국 측에 보스톤 테러 용의자인 차르나예프 형제에 관한 결정적 정보를 제때에 넘겨주지 않아 테러를 사전에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 러시아 인터넷 뉴스통신 뉴스루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로저스는 테러 용의자인 타메를란 차르나예프가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 주베이다트와 한 전화통화 내용이 뒤늦게 전달되면서 테러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테러 후인 지난 4월 말 타메를란이 주베이다트와 지하드(성전)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전화 통화 감청 자료를 미국 측에 넘겨줬음. 또 다른 감청 자료에 따르면 타메를란은 러시아 북(北)캅카스 지역 이슬람 반군들에게 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음.
- 로저스 위원장은 미국 정보 당국이 사전에 이같은 정보를 확보했다면 차르나예프 형제에 대해 전혀 다른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차르나예프 형제의 통화를 직접 감청해 이들의 테러를 미리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
- 앞서 2011년 러시아 정보기관은 미국 측에 타메를란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연계했을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음. 미국 정보 당국은 이에 근거해 타메를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
-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미국 측의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스톤 테러가 터지고 나서 뒤늦게 타메를란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미국 당국이 그를 미리 체포하지 못했다는 것이 로저스 위원장의 주장
- 한편, 경찰 추격 과정에서 총에 맞아 숨진 타메를란은 지난 9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북부 외곽에 있는 이슬람 묘지에 묻혔음. 생포된 동생 조하르는 재판을 앞두고 있음.

사. 중 · 일 관계

● <일 · 대만 센카쿠 어업협정 10일 발효>(5/7, 연합뉴스)

- 일본과 대만이 지난달 체결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근해 어업협정이 10일 공식 발효됨. 양국은 각각 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대만 연합보가 7일 전했다.
- 센카쿠 어업협정이 발효되는 것은 양측이 1996년 첫 어업회담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임. 양국 어선은 앞으로 북위 27도 이남, 센카쿠 주변 12~24해리 공동 관리 구역에서 상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조업



을 할 수 있음.

- 다만 어업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센카쿠 12해리 내 어업권과 관련 해선 일본과 대만이 각각 자국의 영유권이 미치는 지역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일본과 대만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실무협의 기구인 일본·대만 어업위원회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어업위 운영 방법과 공동 관리 수역에서의 조업 규칙 등에 대해 논의했음.
- 회의에는 양국 어민 대표들도 참석해 조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음.
- 어업위원회는 일본과 대만 2인씩,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양국은 연간 한 차례 이 위원회를 열어 센카쿠 근해 조업 문제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함.
- 한편, 중국 당국은 일본과 대만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일본, '오키나와 재논의' 인민일보 사설에 항의>(5/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중국 인민일보가 8일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열도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의 귀속 문제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한 데 대해 외교루트를 통해 항의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인민일보의 사설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교루트를 통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음.
- 스가 장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항의는 8일 외무성을 통해 주일 중국대사관에, 주중 일본대사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도 전달됐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사설은 연구자 개인의 입장에서 집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8일자 사설을 통해 오키나와(沖縄)의 전신인 류큐(琉球) 왕국은 독립국가로 명나라시대부터 명 황제의 책봉을 받았으며 명·청 시기에는 중국의 번속국이었다면서 "역사적으로 미해결 현안으로 남아있는 류큐문제를 재논의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 일본은 메이지(明治) 유신후 1874년 대만과 류큐를 침략했으며 1875년 청 조정과의 책봉관계를 단절토록 한 뒤 1879년 류큐왕국을 강제로 일본에 병탄하고 이름도 오키나와 현으로 바꿨음.

● <중국 "일본 군국주의 침략, 학살 문제 아니다">(5/9,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는 명백한 증거로 확정된 사안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찍이 정해진 결론이 있다"고 밝혔음.
- 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 대외 침략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가 해명에 나선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일본 지도자의 역사 문제에 관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음.
- 화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침략 개념을 놓고 학계에서 여러 논의가 있다



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건 학술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그는 "일본은 과거를 직시해야 미래를 열 수 있다"며 "일본이 책임 있는 태도로 철저히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베 총리는 지난달 23일 참의원 답변에서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샀음.
-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8일 "학문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어 절대적인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했던 것으로 정치가로서 (이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
- 한편, 화 대변인은 전날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오키나와의 주권 귀속 문제를 제기해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항의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음.
- 화 대변인은 또 "최근 이 문제(오키나와 귀속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일본이 다오위다오와 관련한 도발적 행동을 해 영토 주권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 기 타

● <미국 "중국 센카쿠 영해기선 설정은 부적절">(5/7,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6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군 활동 연차보고서에서 중국이 작년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 '영해기선'을 독자적으로 설정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음.
- NHK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2012년 9월부터 중국은 센카쿠 주변에서 부적절하게 설정한 영해기선을 쓰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음.
- 중국의 영해기선 설정에 대해 미 국방부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처음임.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가 작년 자국 영해 표시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선을 독자 설정, 유엔에 일방적으로 신청한 데 대해 "중국 측의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반론해 왔음.
- 이와 관련,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영해기선은 "국제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아베 "억지력 차원서 적기지 공격력 논의 필요">(5/9,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계기로 등장한 적(敵) 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상대가 '일본을 공격했다'는 우리 국익과 국민 생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단념하도록 하는 억지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일본의 방위력 전반에 대해 그는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으로서 둘이 함께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라고 반문했음. 다만 적 기지 공격력 보유는 "국제적인 파장이 있는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음.
- 이와함께 아베 총리는 "도서 방위를 위해 해병대적인 기능을 갖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열도를 포함한 난세이(南西)제도(일본 규슈 남쪽과 대만 동쪽에 걸쳐있는 섬들의 총칭) 방위와 관련, 상륙작전을 담당할 해병대 기능을 자위대에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음.
- 그는 특히 "중국이 방위비, 특히 해양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아베 총리는 역대 정부가 헌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 영토 근처에서 일본을 위해 경비를 하고 있는 미국 함선이 공격받았을 때 근처에 있는 자위대 함선이 돕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돕지 않으면 동맹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음.
- 아베 총리는 "최종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헌법 해석을 해야 하며, 현재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일본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강화하기 위한(헌법) 해석이 돼야 한다"며 헌법 해석 변경에 의욕을 드러냈음.
- 한편,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킴.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중국-주변국 영토분쟁 남중국해 긴장감 고조>(5/11, 연합뉴스)

- 중국과 필리핀 등 주변국 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 준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11일 새벽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로 조업을 나가던 중국 어선 선단에 다른 나라 공무선으로 보이는 선박이 따라붙어 감시 활동을 했다고 보도
- 길이가 30m가량인 이 선박은 어선이 아닌 공무 선박으로 보였으나 국적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이 선박은 1시간가량 중국 어선들을 따라 항해하다가 돌아감.
- 이 같은 사건은 최근 남중국해 주변해역에서 필리핀의 대만 어선 총격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벌어져 더욱 관심이 쏠림.
- 이와 함께 필리핀 일간지 마닐라스탠더드투데이를 인용한 중국 신화망



(新華網)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 구축함 1척과 민간 선박 2척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런이자오(仁愛礁) 근해를 항해했음.

- 이에 필리핀 해군은 순찰함 1척, 구축함 1척, 병력 운송함 1척 등 모두 3척을 급파해 중국 선박을 감시했음.
- 필리핀 해군 고위 간부는 "중국 구축함은 런아이자오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민간 선박 2척은 런아이자오로 빠르게 돌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 런아이자오는 최근 중국 어정선 45001호가 물대포를 발사해 필리핀 선박으로 추정되는 외국 선박의 접근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진 메이지자오(美濟礁)와 인접. 모두 양국 분쟁해역에 속해 있음.
-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남중국해 주요 도서에 대한 감시를 상시화해 자국 어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힌 뒤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을 비롯한 분쟁도서 부근 해역 항해를 강화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